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으로... 자치재정·입법권 반영

윤곽 드러난 정부 개헌안... 무슨 내용 담았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12일 국민헌법자문특위 등에 따르면 개헌 자문안(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자문특위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달 19일 개설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묻는 설문에는 '4년 연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표기돼 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이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진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전체 2만571명 중 1만6135명으로 약 78.4%에 달했다.

대통령 선출 제도도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초안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 찬성 4219

4년 연임제로 변경해도 문대통령 연임할 수 없어 '수도 조항' 법률로 규정 대선 결선투표제도 논의

명, 반대 1만5275명으로 반대 의견이 78.4%에 달했다.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수도조항 포함에 찬성한 사람이 1만839명이었다.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특유는 이밖에 ▲제2국무회의의 ▲새 기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문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에산심의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토지공개념 명시 ▲국회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특유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개헌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급물살

정의당 의총 찬성 뜻 모아 '정책 동맹' 등 논의 나서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두 정당 간의 협상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이단 정의당은 평화당과 서로 정체성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동맹'을 이루는 방안이 관해 자체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 등의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넘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민생 정책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를 누가 맡는지도 관심사다. 공동 대표 체제가 유리한 가운데 정의당과 평화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2개월씩 나눠 맡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은 1개 내지 많아야 2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당내 분란 등을 우려, 당원 여론 수렴과 실속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남 등 일부 지역의 반대나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의 반발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 권역별로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는 이와 함께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광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원단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의 견해도 들어 최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의원단 뜻을 모은 데 대해 "다시 촛불광장에서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라며 "당원 여러분이 의원단의 고뇌 어린 진심을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일단 평화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17일 이후로 미룬 상태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무위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됐으나, 오는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승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정의당 의원단의 긍정적인 반응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정의당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당은 구체적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서둘러 협상안을 제시했다가 자칫 교섭단체 추진 분위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결의하면 실무 협의에 나설 생각"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국회 여야 합의안 나오면 정부 개헌안 철회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개헌안이 발의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미

리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합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28조~130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라는 발의 절차만 나와 있을 뿐 철회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상당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을 표결에 부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도 "대통령이 이미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그 절차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